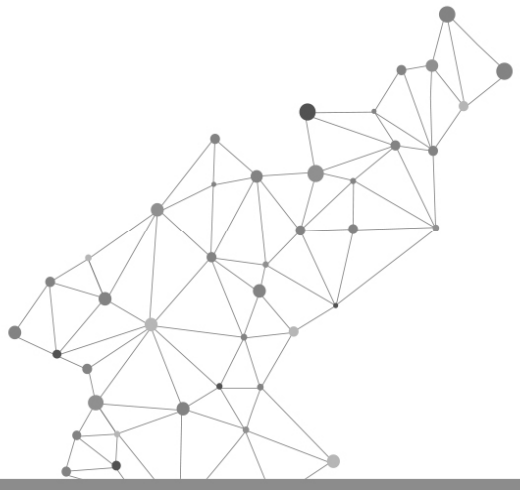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산업과 기업: 사실, 개념 그리고 추세 | 이석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산업과 기업: 사실, 개념 그리고 추세

북한경제 연구에서 산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산업 및 기업은 나라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 정보가 극히 희박하여 그 움직임을 외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늘날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활동은 과거 사회주의경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북한 당국의 계획보다 시장, 이윤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일상적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북한경제의 변화와 개혁은 산업과 기업 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KDI 북방경제실에서는 산업연구원(KIET)에서 북한의 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와 관찰을 수행하신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이석기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자: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대담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년 6월 26일(금),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진행



▌오늘 〈대화〉에서는 북한의 산업과 기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외부 세계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분야 중 하나가 북한의 산업과 기업일 것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북한의 산업이나 기업은 북한경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향후 경협이나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북한의 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이신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이석기 박사님은 30년 넘게 북한의 산업, 기업을 연구하셨고 정보와 데이터를 모두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편의상 1990년대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누어, 첫 번째는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과거 모습,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산업과 기업의 전형, 기본적인 형태와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초기 북한의 산업 및 기업의 모습들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변화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2000년대 경제위기 이후부터 오늘까지 북한의 산업과 기업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 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여쭈어 보려고 한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의 산업과 기업

▌그럼 먼저 1990년대 이전 북한의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 1990년대 이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북한 나름의 변형이 가미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이후의 모든 산업과 기업 활동을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된다. 먼저 북한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더불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했고, 비교적 선진적인 산업화를 이룬 과거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였다. 북한은 초기 출발 조건(initial condition) 자체가 남한보다 공업화 및 산업화에 유리하였다. 일제가 한반도 경영을 할 때 한반도 남쪽 지방은 주로 쌀과 면화를 수탈하는 지역이었고 북부는 대륙 진출을 준비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전력, 철도, 화학, 제철 등 기반산업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남한 전력 수요량의 70%가량을

공급하고 있던 북한이 분단 이후 남쪽으로의 전력 송전을 중단하면서 북한 내 잔여 전력량(전기)은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은 당시 남아도는 전기를 일차적으로 금속과 기계 등 군수공업에 활용하고, 다음으로 농업과 경공업에 공급하여 최종 소비재와 식량을 만들고 다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같은 시기에 남한이 발전소부터 지으면서 기간산업을 시작한 반면, 여러모로 북한의 초기 출발 조건은 남한보다 훨씬 유리하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 내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고무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받을 수 있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우호가격, 즉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특수한 가격으로 상호 무역 거래를 했다. 북한 역시 구소련에서 낮은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수출을 하였다. 국제경쟁력이 없어 전혀 팔리지 않을 법한 북한산 기계류도 사회주의 국가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사실상의 원조가 진행되었다. 구소련이 북한에 김책제철소 등을 직접 지어주고 핵심 설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원조도 있었지만, 위와 같이 사회주의 무역을 통한 간접원조도 상당한 규모였다. 직접원조로 인프라가 갖춰진 중화학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 간접적인 원조가 지속된 것이다.

초창기 북한은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과 투자를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했고, 효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1970년대까지는 공업화가 제법 이루어졌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공업과 서비스가 뒤처지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전력, 석탄과 같은 에너지 부문부터 시작하여 제철, 금속이나 소재(원자재), 화학, 기계산업 등 자본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공업과 농업에 이르기까지 전체 산업을 아울러 하나의 산업 순환구조를 갖추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형태는 북한뿐 아니라 당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찰 가능하다. 구소련이 먼저 구축한 형태가 각국으로 이식되었는데, 구소련이 상정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인 특수한 형태이자 자본주의 진영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가 동유럽, 중국, 북한으로 이식되면서 동일한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화된 내부지향형 공업화를 진행하였다. 휴전이라는 더욱 특수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일성 전 주석이 북한 내의 원자재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극히 일부 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내부 자원만 이용하였다. 수자원과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전기와 철광석을 결합시켜 금속소재를 생산하고, 이 금속소재를 이용해 기계를 만들고, 한편에서는 석탄과 전기를 결합시켜 석탄화학으로 화학소재를 만들고, 이를

공급해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꼭 필요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이런 사회주의경제가 계속 작동하고 유지되려면 석탄과 철광석 등 기초 원자재의 생산량이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야 한다. 노동력의 경우 1970년대 초중반에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중후반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미 1980년대 초반에 경제가 더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고, 북한경제는 정체를 보이다가 1990년대부터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

▌전반적인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셨다. 과거 북한은 소련식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조하였고, 산업의 움직임도 시장경제와는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포함한 당시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하에서의 산업 부문은 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산업을 육성할 때에도 철저히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찰하면 국방과 경제의 병진노선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산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책으로는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초기의 북한 산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식 표현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 명명되는 내부지향형 공업화 전략은 사실 1970년대까지도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했다. 특히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내부적 반성이 나왔고, 그 후 서방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서 석탄화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석유화학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원래 계획은 서방자본을 들여와서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외채를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일쇼크가 오는 바람에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 1980년대 초에 합영법을 제정하고 다시 외국자본을 활용한 경제부흥을 모색하였고, 이때 주로 조총련계 자본을 끌어들여 활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총련계 기업가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공장명을 '애국공장'이라고 지을 정도로 조국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고, 상당한 투자와 성과 창출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조총련 기업들이 성과를 내자 북한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수탈적 방식으로 부담을 주는 바람에 모두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고, 북한의 경제부흥 전략도 실패하였다. 시장을 기반으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들여오는 투자는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

북한의 산업정책은 매우 단순하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자본재 부분이 먼저 성장해야 장기적으로 소비재 부분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이

더해졌다. 소련의 방식을 따라 북한도 중화학공업에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농업과 경공업, 소비재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투자하였다. 북한 당국의 재정 투자는 경공업이 아니라 군수공업과 연계된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은 북한 전체의 경제 사정과 별개로 북한이 소위 가장 잘나갔다는 1970년대 말~80년대에도 매우 열악했는데, 북한의 중화학공업 투자로부터 경공업으로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정도가 되면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기존 방식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었다. 예컨대 군수부문에서 탱크를 더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하면 금속이 필요하니 부족한 금속을 조달하기 위해 제철소를 하나 더 건설하거나 기존 제철소에 고로를 더 세우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1960~7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점차 자본의 효율성이 하락하여 불가능해졌다. 거대한 규모로 화학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가 결국 완공을 못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 공장 건설 중단의 대표적인 예가 순천화학비날론연합기업소다. 계획대로 공장을 지으면 완공이 되고 돌아가서 생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설사 공장이 계획대로 지어지더라도 생산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점차 공장도 짓다가 마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1980년대 말에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하고 높은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놓고 잘 작동하지 않자, 김정일 전 위원장이 '속도전'을 언급하게 되었다. 속도전은 미래에 투자할 사람과 물자 등 자본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단기적인 반짝 성과를 얻었고 이것이 치적이 되어 김정일 전 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반짝 성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훨씬 더 긴 조정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북한경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체되었다. 그 후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수해, 김일성 전 주석 사망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시기적으로 1970년대 이전과 이후 1980년대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1970년대까지는 내부지향형 공업화를 강조하다가 점차 벽에 부딪히면서 서방의 외채를 들여와 중화학공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오일쇼크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80년대는 합영법을 제정하고 조총련의 자금을 활용하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였지만,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산업정책의 특성으로는 중화학공업과 자본재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국방 경제 병진노선을 취하였다. 성공했다면 중화학공업에서 경공업, 농업까지 연이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수 있었겠으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채 경제가 어려워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런 상황에 여러 변수가 중첩되면서 경제가 크게 곤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셨다.

아까 연합기업소 등 규모가 큰 기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공장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서 중화학공업, 포괄적으로 자본재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중앙기업, 즉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한편, 소비재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재 공장은 수요 지역에 배치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전부 지방에 배치된다. 식량과 관련된 농업은 별개 산업이고, 1980년대까지 최종 소비재라고 해봤자 주로 섬유, 의류, 식품가공품, 수지 일용품이라고도 하는 화학제품, 농기구 같은 철제 일용품이 전부이다. 이런 물품을 만드는 장 공장, 옷 공장, 수지 일용품 공장, 철제 일용품 공장 등 최종 소비재 생산 공장은 북한의 말단 행정단위인 '군' 단위로 배치된다. 사실상 별도의 이름도 없이 지역명을 붙여서 부른다. 예컨대 창성군에 배치된 옷 공장은 편의상 '창성군 옷 공장' 같은 식이다. 이를 '지방산업공장'이라고 하며 군 단위의 지방에 수천 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존재한다.

북한은 계획경제의 운영방침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의해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지방산업공장까지 모두 관장한다. 계획의 일원화는 제일 상위의 국가인민계획위원회부터 지방 말단의 산업공장까지 하나의 계통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이고, 세부화는 이론적으로 모든 생산 제품의 투입과 산출이 중앙계획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류를 생산하려면 섬유가 필요한데, 섬유는 중앙섬유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하므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즉, 최종 소비재 공장은 일원화에 의한 계획경제 속에서 기본적으로 상위 공장인 경공업 공장(예컨대 옷 공장의 경우 중앙섬유공장)에서 관리, 통제를 받고 동시에 도 인민위원회에서도 통제를 받는다. 이중 통제인 셈이다.

물론 통제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지방산업공장의 경우 중앙에서 물자는 공급해 주지만 생산된 제품이 다시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만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는 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지방산업공장이 중국 개혁개방하의 향진기업처럼 지방정부 산하의 기업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규모가 작고 계획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메커니즘이 다를 뿐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최소한의 투자만 하려다 보니 소비재 부분의 투자를 지방정부에 전가한 측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기업의 구분을 살펴보면, 기업의 생산규모(노동자 수, 고정재산과 생산능력 등)와 국가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크게 대규모 기업소와 중소규모 기업소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특급(연합, 종합기업소), 1급, 2급, 3급, 지방산업공장 등으로 분류된다.

주로 규모를 기준으로 중앙기업소(특급~3급) 지방기업소(4~7급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로 구분되는데, 중앙기업소(특급~3기업소)는 국가의 계획 투자에 의해 건설된 공장으로 중앙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운영한다. 특급기업소는 군수품 등 특수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평양방직공장 등이 있다. 1급은 희천공장기계공장, 청진화력발전소, 2급은 낙원기계공장, 순천제약공장, 3급은 함흥제사공장, 신의주제지공장 등이 있다. 지방기업소(4~7급의 중소규모)는 지방자금에 의해 건설된 공장으로 시군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운영한다. 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피복, 식기 및 그릇, 식료품, 음료, 과자, 밀가루 가공공장 등이 해당된다.

규모가 아니라 기업의 활동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다. 주로 대규모 기업에 대한 분류인데, 연합기업소와 종합기업소가 여기에 속한다. 연합기업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전략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그와 생산기술적으로 연계되는 기업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금속,기계, 화학 공업에서 조직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나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대표적인 수직적 연합기업소이다. 수평적인 기업연합체로서의 연합기업소도 있는데, 주로 특정지역의 동종 기업을 망라하는 기업들로 조직하는 형태인데, 광업부문에서 주로 조직된다. 이 형태의 대표적인 연합기업소는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있다. 주로 남한의 수평적 기업집단과 같은 형태이다.

종합기업이나 연합기업소를 만든 것은 공장수와 생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기업을 큰 단위로 결합하고, 연합기업소 내부 기업들간의 생산관계는 연합기업소 자체적으로 계획화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중적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1970~80년대까지는 중앙기업이나 지방기업의 관리 방식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지방산업공장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계획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다. 지방의 경우 원료생산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산하거나 협동농장에서 원재료를 조달받아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공급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계획에 맞출 필요가 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옷 공장들은 중앙정부에서 섬유를 받아 의류를 만들지만, 장 공장의 경우 바로 옆의

원료생산기지에서 농사지은 콩으로 간장, 된장을 만든다. 섬유류와 식품류는 생산 과정에서 중앙계획과의 관계나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계획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중앙에 속한 공장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밀한 계획대로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이런 방식의 운영이 수월하였다. 생산품 종류도 얼마 안 되고, 공장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를 넘기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연합기업소 정도 규모의 기업은 한참 많을 때는 수십 개 정도였다고 알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발전소는 전부 연합기업소에 포함되고, 제철・제강소들, 화학의 경우 2.8비날론기업소와 같은 공장들, 규모가 큰 기계공장들, 발전기 관련 중전기 공장들도 모두 연합기업소 급이다. 유명한 대한중기계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남포와 원산의 조선소 역시 규모면에서 특급기업소에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합기업소 수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현재 1~2급까지 포함하여 수백 개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의 기업은 크게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앙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고, 지방기업은 최종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여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연합기업소는 일종의 수평적인 기업집단이면서 규모에 따라 중앙부터 지방까지 연결되는 수직적인 구조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기능적으로는 생산과 투입을 전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아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통해 각 기업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각 산업별 기업들, 특히 국영기업의 운영은 조금 특별하다고 알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취했던 것과 달리 과거 북한에는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독특한 기업 운영방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실제 현실에서 북한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궁금하다.

북한도 초기에는 지배인 유일관리제 형태를 취하다가 대안의 사업체계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하듯 지배인이 마음대로 행정관료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고,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구현하는 북한의 경제 관리 형태이다. 공장과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수행하

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을 동원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상부과 하부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경제 관리 체제이다. 산업 관리와 운영조직 측면에서는 공장 당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제가 적용된다. 공장 당위원회에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고 채택한 다음, 이 결정에 따라 당비서는 당사업을 하고, 지배인은 행정사업을 하고, 기사장은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등 직능에 따라 일을 한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최고 지도기관인 공장 당위원회에서 총화하고 평가받게 된다.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결국 노동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내각이 집행하는 형태가 그대로 기업에 적용된 것이다. 소위 '군중노선에 기초한 계획화 체계'라고 하는데, 공장의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갖는다. 기업의 경제계획도 구성원들이 모두 포함된 당조직 차원에서 결정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공장장이 지도하고 공장의 당비서가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나, 형식적으로는 당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공장 당조직을 중심으로 공장 안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공장 내 정책적・정치적 결정과 행정적・실무적인 결정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은 제일 상위의 조직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배인은 이 정책에 따라 일종의 내각 또는 집행부처럼 기술적 운영과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을 총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계적 구조로 운영된다. 인사권(노동자의 배치) 등 결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당조직이 모든 결정과 집행을 하고, 지배인은 그 명령에 따라 운영한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내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은 지배인의 역할로 설정되어 있지만,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은 기업 당비서가 지배하는 공장당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업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시장과 연계한 기업의 생존이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내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극단적인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하의 생산체계이다. 즉,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지도를 하고 자재를 중앙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각 직장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와 맞물린 방식이기도 하다. 계획에 의해 작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가 열 대 있으니 어느 정도 분량의 중간재를 보내주면 한 달에 백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계획을 올리고, 중앙에서 이를 취합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대로 다시 지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번 오가면서

중간에 협상도 이루어지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과정이 공장 내의 조직원 총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실제로는 당비서가 결정하는 체계이다. 일단 결정이 나면 그에 맞게 물자공급 계획도 계약을 통해서 진행된다. 얼마에 주고 얼마에 사는 것까지 다 계약하지만, 사실 낭비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다. 또한 중간에 '자재상사'가 개입되어 있다. A라는 기업이 물자를 만들어 B공장에 자재를 공급할 때, A기업이 B공장에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재상사가 계획에 따라 A로부터 구입하여 B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식적인 과정이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공장이 공장원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 안의 조직체계를 보면, 후방사업본부라고 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관리 겸 생산력 제고를 담당하는 곳이 있다. 이 후방산업본부에서 기업소와 근로자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직접 책임지고 공급한다. 공장과 기업소가 해당 주민들의 주거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식품, 의류 등 생활 전반을 책임지며, 생활비 및 배급품을 공급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비슷한 체계가 있지만,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후방 공급 체계가 보다 명시적이다. 화폐와 임금도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노동임금이 동일하더라도 소비재는 다른 공급노선을 통해서 국영상점에 배급되므로 이 임금으로 쌀도 사고, 치약도 사는 식으로 운영된다.

▌아주 독특한 기업 운영방식이라 대안의 사업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다. 기업 운영 체계상 현실적으로 당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 결국 현실상황에서는 지배인 유일관리체제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다.

사실 당과 당비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배인을 포함한 공장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생산계획을 작성할 때 현실과 조금씩 차이를 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기계 열 대를 가지고 제품을 백 개 만들 때 원자재가 50이 필요하다면 50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원자재 50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올리면 50 그대로가 아니라 40 정도만 공급될 것이다. 제품 백 개 만들겠다고 계획을 올리면 120개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 결국 공장단위에서부터 기계 열 대에는 중간재가 60이 필요하고, 제품은 80개 만들 수 있다고 여유를 두어 올린다. 즉, 생산계획 작성 과정에서 기업소들은 가급적 생산목표를 낮게 잡아 실제 생산능력을 속이고 감추는 것이 관행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듯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생산 제품 중에서도 당이 정치적으로 강조하는 분야와 아닌 분야가 있고, 정치적인 의지가 약한 분야는 공장 내부 담합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학생용품을 예로 들면, 국가와 당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을 중시하면 학생용으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러나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지배인은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제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배인과 당비서가 선호하는 생산물 조합을 찾고, 생산 방식도 일정 부분 타협하며 운영하게 된다.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타협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당비서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결국 지배인 유일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공장과 기업소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장 안에서 당조직을 한 번 거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비효율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군중노선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치적인 자극으로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끌고 가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노동자의 혁명적 열의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직 내외에서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소비에트나 중국에도 공장 내 당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재무제표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무제표를 보고 생산, 이윤을 고려하여 계획을 내는 것은 공장장이 알아서 하고 당위원회는 정치적으로 감시만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위원회가 계획까지 다 개입한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 중앙자재공급처에서 일률적으로 자재를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기업소 간에 협상(bargaining)은 없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트랙터를 백 대 생산할 때 A기업이 철강 50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후, 해당 공장이 A기업으로부터 50톤을 공급받고자 요청할 때 상호 거래나 협상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방 공급 체계가 매우 흥미롭다. 기업별로 주민들의 생활 보장 수준에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다. 김책제철소를 다니는 경우와 지방의 장 공장에 다닐 경우 후생복리 수준이 매우 다를 것인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복리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북한도 이론적으로는 소비에트나 중국과 유사하게 당조직은 정치사업만 하고 기업 운영상

행정사업은 지배인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군중노선 개념은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군중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중회의는 당조직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조직이 지배받는 구조이다. 중국의 경우 이 문제가 지속되자 정경 분리를 진행했고, 결국은 현재 기업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협상은 기업 간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금성트랙터 공장이 김책제철소에서 철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협상은 금속공업성 혹은 그 아래의 중간 기구에서 이루어진다. 김책제철소의 경우 철을 배분해 주는 중앙자재공급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 김책제철소는 금성트랙터에 철을 어느 정도 공급하라는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 수직적으로 작성된 계획이 하달되는 구조이다.

기업소별 후생복리 수준 관련해서, 임금의 경우에는 김책제철소 근로자가 3,000원 받는다면 지방에 있는 장 공장 근로자도 동일하게 3,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김책제철소의 경우 아예 내부적으로 건설단위가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지방산업공장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 경우 행정조직에서 집을 지어주기는 한다. 장 공장이 집을 못 지어주면 도 인민위원회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다. 여전히 그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 평양의 대형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꿈인 것이다. 규모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과거 북한 산업 및 기업 활동을 간략히 조망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린다.

북한의 제조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환경도 좋아서 공업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특유의 문제가 북한에도 존재했다. 공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문제도 빠르게 발생했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를 더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강하게 나타난다. 핵심적인 문제는 물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물자를 공급해 달라고 계획을 통해 요청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한다. 물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철 시스템 안에 기계공장도 만들었고, 기계공장에서도 금속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산업별,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러시아처럼 면적이 큰 국가면 상관없겠지만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내부에 모든 생산부문을 다 갖추어 운영하면 중복 투자가 매우 많아진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수요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선호에 따라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자원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나온 자구책이 결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생산부문을 갖추는 방식으로 성 단위, 지역 단위, 기업 단위를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 결과 투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외부와 차단되면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뒤떨어져 기술력이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새로 지은 공장은 괜찮았지만 1980년대쯤에 이르러 일정 정도 추가 투자가 멈추는 순간 기술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북한이 1990년대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문제가 누적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긍정적 유산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 유산도 되기도 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몰락한 공업국가다. 북한을 볼 때 소득 수준만 보고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과거 공업화를 이루었고 나름대로 제철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나라였음을 전제로 보아야 한다. 시장의 경우도 공급되던 서비스들이 다른 형태로 빠르게 전환된 측면이 보인다. 처음부터 없던 것이 아니라 목욕탕, 이발소 등 공업국가의 잔여물들이 사회주의식으로 다 잔류해 있다. 사회주의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은 애초에 없었던 목욕탕이라는 개념부터 정립해야 하지만, 북한은 그것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산업과 기업의 변화

▌초기 출발 조건이 유리했던 북한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내부지향형 산업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구축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문제인 투자의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었다. 그 후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산업 및 기업 활동 관행이 대부분이 붕괴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기존 지방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연합기업소 같은 특급 기업도 대부분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들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산업과 기업 활동의 환경이 변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기존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었는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은 시장경제처럼 부도 처리되어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산업이나 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초기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무엇보다 에너지부문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에너지 사정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갖추었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가 무너지면서 핵심 에너지원인 원료의 수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전부터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광산, 탄광, 철광산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석탄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면 바로 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전력과 수송에 문제가 생긴다. 북한의 핵심적인 원자재인 석탄은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석탄 운반이 힘들어진다. 석탄을 운반하지 못하면 석탄화학산업이 중단된다. 즉, 소재산업이 다 안 돌아가게 된다. 전기 배급에 문제가 생기고, 석탄 운송이 멈추면서 제철소도 안 돌아간다.

기간산업인 제철소와 화학공장이 안 돌아가고 전기도 줄어드니 중간재는 물론 중화학공업, 경공업, 농업이 모두 멈추게 된 것이다. 전기가 모자라면 중화학공업 관련 부문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경공업은 아예 멈출 수밖에 없다. 농업도 원래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을 전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기를 이용하여 수리장비를 운용하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모든 협동농장이 발동기를 돌려서 물을 공급하는 식이었다. 결국 전기와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농장까지도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멈추게 되었다. 비료도 없어졌다. 북한의 비료는 기본적으로 석탄화학 공장에서 많이 생산했는데 그 생산도 멈추었다. 1970년대에 만든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비료를 생산했지만 원유가 줄어드니 이것도 문제가 생겼다. 결국 자본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갔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은 아무리 무너져도 법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파산 제도가 없고, 기업을 폐쇄할 수가 없다. 지방의 옷, 간장, 된장 공장에는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출근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동이 의무라고 하지만 생산할 것 없이 내버려 두면 노동자들이 빠져나간다. 건물만 폐가처럼 남겨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국영상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건물만 남아 있다가 돈 있는 사람이 인수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고용되어 있던 직장이 그렇게 없어지면, 속해 있던 노동자는 해방되어 실업자가 된다. 수천 개의 지방 산업공장에서 빠져나온 실업자가 매우 많았을 것이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술 공장 같은 것을 시장을

통해 운영하기도 한다. 수천 개의 지방 산업공장 중 70~80%는 문을 닫았을 것이다. 대규모 공장들은 문을 닫지는 않지만 일거리가 없으므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만 출근한다고 한다.

▌공장이 폐허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이들을 다른 일자리로 배치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기업에서 후방산업으로 복리후생까지 다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이 없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장이 없어진다고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그 공장에 고용된 것이다. 결국 국가 단위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아예 없어졌음을 공인하는 공장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포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 공장은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었는데 소속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다. 큰 공장들은 이런 식으로 없애거나 합병하기도 한다.

후방산업까지 할 정도의 큰 기업들은 대부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물론 남포제련소처럼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그 권한이 지방단위 등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1990년대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후방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찌되었든 지어놓은 집은 그대로 있었으니 사람들이 눌러앉아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거나 굶어 죽기도 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파산하거나 부도가 난 것이 아니므로, 출근 도장만 찍고 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사가 좀 잘 되면 암암리에 공장에 돈을 내고 아예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 기록을 남기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공장을 계속 돌린다. 접경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8.3 노동자'들이 북한 돈이 아닌 외화로 돈을 내기도 한다.

▌'8.3 노동자'의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8.3'이라는 용어는 '8.3 인민소비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지시했던 것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별도의 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소비재를 생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 공장에서 쇠를 깎고 나면 나오는 쇳밥 등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일용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공장에서 중앙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8.3 인민소비품이다. 이러한 소비품에 관해서는 기존의 엄밀한 물량(물적) 계획 대신 금액으로 통제를 했다.

이를 액상계획이라고 하며, 8.3 제품은 화폐 단위로 산정을 하면서 생산에 있어 약간의 여유를 허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공장에서 자투리 목재로 나무쟁반을 만들어 8.3 소비품으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등록을 하면, 물량 기준이 아닌 전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한편, 물자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점차 8.3 제품을 통한 액상계획이 기업의 거의 유일한 계획이 되며,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가 8.3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액상계획의 달성이 되게 된다. 문제는 8.3 제품 생산 및 판매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태반이라서 종업원들에게 돈을 거두어 액상계획인 8.3 계획을 달성하게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으러 출근하기보다는 장사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출근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8.3 노동자는 일방의 필요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요구가 결합되어서 생긴 측면이 있다.

전에 없던 이상한 형태의 계약 단계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전에는 기업이 노동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조직이 노동자를 기업에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8.3 노동자는 기업에서 노동자와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상한 거래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기업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어떤 기업들은 사실상 문을 닫고, 어떤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 수를 줄이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과거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구축되었던 여러 산업이 다 중단되면서 경제위기를 겪었다. 대부분 기업이 문을 닫고 국가 차원에서 주요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없어진 기업들도 있고, 명맥은 유지하나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8.3 노동자가 등장하고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더 부탁드린다.

1990년대의 극적인 상황 변화를 만든 첫 번째 요인은 19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 때 식량 공급이 부족해졌고, 노동 강도가 높은 탄광 같은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러다가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북경협으로 대외무역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이다. 당시 모든 의사결정은 김일성 전 주석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하자 의사결정 시스템에

마비가 왔다.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자원배분 기능이 아예 멈춰버렸고, 극단적인 사례로 모든 건설현장이 그대로 멈추었다. 사실 건설현장은 노동자도 있고 자재도 있었으므로 작동하기가 가장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자재와 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일하지 않게 되어 모두 멈춘 상태가 된 것이다.

초기에는 지원을 받다가 점차 대외무역을 통해서 약간의 자원이 들어왔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의사결정이 멈춘 상태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회복하였다. 노동자들은 시장을 통해서 수입품을 조금씩 서로 교환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가동하지 않는 공장의 자재들을 많이 뜯어갔는데,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뜯어내기도 했다. 공장에서 고철이나 설비를 뜯어다 팔아서 중국에서 쌀을 사오면 정부에서 칭찬을 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관련 기사에 '수천 톤의 고철을 처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뜯어내고, 노동자들은 구리 같은 것들을 조금씩 뜯어가서 공장은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기능이 점차 회복되었다. 산업은 매우 축소되어 전기, 금속, 화학 정도만 돌아갔고, 산업정책도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2000년대 초반까지 '기술 개건 현대화'라고 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개보수 쪽에 주력하였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면 새로 짓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새로 지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였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개미가 뼈를 깎아 먹듯이 회복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그만큼 매우 느리다는 뜻이다. 정부는 재정 투자 능력이 생기면 대부분 에너지와 운수 부문에 투입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탄광 광부에게로 보내어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며, 석탄이 좀 생산되면 발전소로 보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수출을 하고, 외화가 들어오면 이 구조가 조금 더 확장되었다. 소비재 등 기타 부문은 시장을 매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비자가 옥수수, 국수 같은 식량을 만들어 팔다가 점차 '금성뜨락또르 종합기업소' 같은 기업들도 시장과 연계하여 협동농장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을 매개로 하는 기업활동은 정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정부의 허락은 받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지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3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제철소에서 만드는 철 중에 20%는 제철소에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허용한다. 그러면 금성뜨락또르공장에

서는 김책제철소에 그 분량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의 쇠를 요청한다. 금성트랙터연합기업소가 협동농장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공급하고, 그 협동농장이 김책제철소에 식량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거래를 하면 당연히 현물가격이든 화폐가격이든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꼭 장마당이 아니더라도 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런 구조가 생긴 것 같다.

또 한 번 변한 시기가 2010년도쯤이다. 통계를 보면 2010년도쯤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다.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최종 소비재부문이 회복되니 자본재도 시장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겨서 회복되는 것이다. 예컨대 여타의 이유로 수산물 시장이 형성되면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어선 제조 시장이 생기고,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작은 어선들의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중반에 선박용 엔진 수입이 늘어난다.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엔진은 수입하고, 나머지는 북한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다. 트럭의 경우도 엔진이나 샷시 등은 수입해서 생산한다.

기계산업이 눈에 띄는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인 것 같다. 소재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소비재 시장이 돌아가고 조금씩 확산되니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류 등 자본재 부분도 국내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10년대쯤부터 대북제재 이전까지 제조업 부문이 확산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확산한 부문이 식품가공이다. 제품의 특성상 식품가공은 대부분 로컬 산업이며, 여기에서는 원자재의 확산이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산 원자재가 있으면 섬유, 식품가공용 기계, 포장지, 첨가물 같은 나머지 자재를 수입해 와서 식품가공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비슷한 형태로 신발, 의류, ICT 제품이 있다. ICT 제품도 이전에는 다 수입해 오다가 지금은 반도체, 액정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최종 조립하여 되파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의 대북제재로 모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리하면 1990년대 들어 산업이 모두 중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세 가지 정도의 조치를 한 것 같다. 해외로부터의 원조나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금전적인 능력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배분한 것이 첫 번째, 일반 주민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이 세 번째다. 탄광을 중심으로 에너지부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민들의 소비재 시장이 커지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하며 기업 간 거래 시장도 생겨나 생산이 점차 부흥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또 한 번 석탄 수출을 토대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이 중간재를 토대로 북한 내 여러 기업이 스스로 최종 소비재 또는 중간 생산물을 생산하여 김정은 시대에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온 것으로 이해가 된다. 2017년 대북제재 이전까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북한 산업과 기업 현황 분석

▌이제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현재 외부에서 북한의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현재 북한의 산업이나 기업을 공부하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무역데이터 외에는 산업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 우리가 북한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역데이터뿐이고, 나머지는 관찰자들이 전달하는 정보들이다. 그 외에는 노동신문, 중앙통신과 같은 공식 자료들이 있다.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시장 외 산업부문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지가 않다. 공식 데이터도 산업부문으로 들어가면 거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식 자료 중에서 산업과 관련된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에 산소열법용광로를 새로 만들었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이에 대해 유심히 찾아보면 코렉스 공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코렉스 공법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혹은 탄광에 대해 살펴보면서 '올해는 석탄공업성이 전년도보다 생산이 10~20% 늘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20%라는 수치는 못 믿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내야 한다. 2019년도에 2018년보다 석탄 생산량이 줄었다거나 계획에 많이 못 미쳤다면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지 늘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는다. 북한 공식 자료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또 수치는 못 믿지만 올해 성과가 좋다고 언급을 많이 하는 부문과 언급을 하지 않는 부문을 비교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부문이 좀 더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제적, 이론적으로 상식적인 이유를 대입시켜서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북제재로 섬유류의 임가공을 줄였으니 그 부문이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전반적인 감소를 예상하다가 만약 화학제품의 수입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제재와 상관없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이 화학제품을 수요로 하는 식품가공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비중은 계산할 수 없지만 최대한 추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북한에서 단천발전소를 지으면서 매우 긴 도수터널을 짓는데 여기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추정해 보려고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였다면 표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 확실한 건 없지만 일종의 조각 정보들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상상력까지 동원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정보와 데이터가 희귀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산업이나 기업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자료일 것 같은데, 언젠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함께 여쭙겠다.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서도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무슨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쯤부터는 북한 공장들의 이름은 알아도 어떤 공장이 문을 닫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1990년대 말에 한 번 정리를 했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 자료에 나오는 제조업 공장들 이름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적어도 신문에 나온다면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간주한 것이다. 공장 이름이 나오면 위치, 세부 업종, 지배인, 생산품, 조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기 마련이라 이를 바탕으로 분류했다.

우선적인 분류 기준은 신뢰 가능성이었다. 노동신문에서 '새로 공장을 지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코드 1번 기사로 분류한다. 그다음 '투자를 했다,' '산소열법 용광로를 새로 만들었다' 등은 투자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서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2번으로 했다. 그리고 짓기는 지었는데 규모 파악이 안 되면 3번, 기술을 개발했다고만 하면 4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부여했다. 생산부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강철을 100만톤 만들었다는 기사처럼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다는 내용이 보도될 경우 그 수치는 믿을 수 없지만 구체성이 큰 것이므로 5번, 6번, 7번 순으로 코드를 부여한다.

이렇게 코드를 정리하면 해당 연도에 생산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나왔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나왔고, 투자활동을 한 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 등의 시기별 자료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를 지역적, 사업적으로 배분한다. 특정 지역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분류해 두면

예를 들어 평양과 청진의 기업 특성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특정 연도에 따라 시리즈로 정리할 수도 있다. 물론 정확한 규모를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생산량, 노동자 수, 부가가치 등을 모르기 때문에 극히 대략적인 데이터이다.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시범적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비공개 상태로 두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한 범위만이라도 공개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정보의 출처가 노동신문이기 때문에 주요 기사를 요약한 정보가 들어 있다. 일례로 김책제철소가 산소열법용광로를 지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이에 대한 내용과 경과를 요약해 놨는데, 그 원문까지는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기사 요약까지는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자료 공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번에는 오늘날 북한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북한의 중심적인 산업은 예전과 똑같은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듣고자 한다.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개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이렇게 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방향에 대한 것이다. 전반적인 산업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북한은 여전히 중화학공업이 중심이다. 북한의 4대 선행부문은 금속, 석탄, 전력, 수송인데, 이 4대 선행부문에 속하는 금속, 전력과 화학, 기계 등이 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도 수송, 전력, 광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성장산업은 좀 다르다.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성장산업은 원자재가 풍부한 광업, 지하자원이고, 추세를 보면 수출 경공업에 제재가 없었다면 지금쯤 무연탄이 아닌 임가공 등 봉제의류가 제1의 수출품이 되었을 것이다. 산업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유는 노동자와 공장이 부족해 수입이 높은 특정 산업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 가장 빠른 성장산업은 서비스산업이다. 사실 수출과 광업 외에 북한경제를 회복시킨 핵심적인 산업은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상업 유통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도 매우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목욕탕, 식당, 사진관 등 상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경공업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간재 수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중간 수요가 생기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금속과 화학 분야는 김정일 정권 때 약 2,000억달러 정도 규모로 도입을 계획했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성장은 힘들 듯하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부의 재정투자 능력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중화학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공업과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산업에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탄소하나화학공업 등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계획은 결국 소위 수출가공구,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산 수출자유지역 같은 형태의 구획을 북한의 핵심지역인 남포와 평양 인근에 만들어 수출가공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하는 방식으로 파악된다. 관광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성장 전략은 경공업 부문은 시장에 맡기되, 전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성장정책을 펴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중공업뿐만 아니라 가공 산업, 예를 들면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부품까지 포함해서 수출가공 산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서 옛날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다.

또 하나는 정보화산업이다. 북한의 정보화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정보기기보다는 정보화산업, 좀 폭넓은 의미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첨단산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효율성 제고의 의미가 있다. 북한도 사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일부로서 노동절약적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한 자본을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 경제개발구를 만들거나 무역성 합작합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외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기의 외자도입 정책이 김정일 시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과거에는 경제특구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특구 내에서만 이 제도를 실시하고, 경제특구과 특구 외부와의 경제적 거래를 차단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특구와 경제특구 외부와의 경제적 관계를 상정한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즉, 과거의 닫힌 경제특구에서 열린 경제특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계획을 보면 처음부터 개발구 외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청진공업개발구를 예로 들면 김책제철소에서 만든 철강 등 그 지역에 있는 금속산업과 기계산업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경제개발구가 목표가 아니고 경제개발구를 교두보로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개발구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옛날처럼 경제개발구를 제한하여 파급효과를 막는 상황은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물론 자본이 들어와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는 핵문제로 자본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수출 가공 산업'과 '정보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가공 산업이 상당 기간 동안 외화 가득원이 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 같은 일부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통해 이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노동력 기반의 가공 산업을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20~30년 가공 산업을 했다면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디지털 경제화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북한 산업은 과거와 비슷하게 금속, 화학, 기계 등 선행부문과 광업, 제철 등의 산업 비중이 크다. 경제성이 있는 산업에는 지하자원, 광공업, 서비스산업, 경공업 정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 개념으로 수출 가공과 정보화, 현대과학기술 접목 등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 현재 북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과거 북한 기업의 모습과 좀 다른 특징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처음에 이야기나눴던 북한경제, 즉 사회주의경제의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는 결국 계획경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경제도 잘 작동되지 않고 국지적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전에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는 계획경제라기보다는 중앙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전시공산주의처럼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획화 시스템 외부에서 작동하고 있고, 국가는 전략적인 부문의 핵심기업만 통제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매우 느슨하다. 위로부터 공급이 내려오다가 일정 정도에서 사라지는 수준이다 보니 제도와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등 중이다. 당국으로서도 어느 정도 제도 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자 노력했다.

이제 시장이 있고 생산할 능력만 있으면 생산이 된다. 원래 사회주의경제는 수요에 따른 공급 반응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북한의 기업들은 공급 반응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다. 제재 국면에서 섬유가 막히면 다른 분야로 전환한다. 옛날에는 한 가지 산업이 정해지면 그 산업 내에서만 움직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그런 공급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급 반응에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그렇다면 정말로 북한 기업 내에서 당조직이 물러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배인이 정책을 받아서 경제 운영을 직접 하고, 당조직은 공장 내 노동자의 정치 교화 등 정치 관련 활동만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의 물적 토대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없애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제도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대안의 사업체계를 대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 내에 시장에 제대로 반응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영기업은 법인이 아니며 지분 구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투자라는 것은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해서 지분을 획득하면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은 이론적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임가공을 하거나 설비를 쓰거나 빌려주는 정도는 가능하다. 서비스산업은 회전율이 높으므로 설비투자가 필요 없으니 자본을 빌려주고 받으면 되지만 제조업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도에 만든 유경김치공장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 이 공장은 평양에서 꽤 크고 우리나라 1980년대 수준의 자동화를 구축했다. 배추가 지나가면 소금물에 절였다가 올려서 기계로 자르는 방식으로 꽤 잘 운영되고 있다. 기계는 북한의 자체 기계이다. 옛날에는 다 중국에서 사왔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인 것이다. 평양시 철제 일용품 공장, 대동강맥주 공장 같은 곳에서 설비를 공급했다고 한다. 설비를 시장가격, 혹은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에서도 자금을 대겠지만, 유경김치공장 설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여 기계공장에 필요한 기계를 발주하는 것이다. 기계공장은 돈만 주면 기계도 제작할 수 있고, 쇠 같은 자재는 없으면 중국에서 사오면 되기 때문에 발주받은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 유경김치공장이 성공하니까 각 지방에 김치공장을 또 만드는 모습이 보인다. 요즘 경공업이나 소비재 부문의 방식이 이런 것 같다.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다 짓고 자재도 다

공급해 줬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될 공장을 하나 만든다.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를 투자하고 다른 데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모델 공장을 만들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일부는 당 엘리트들에게 공짜로 주면서 선전을 한다. 국가가 허용한 방식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지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경공업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상업은행이 안 돌아가고 지분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운영된다. 만약 외국자본 등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면 꽤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한 산업 연구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의 기업이 지배구조, 운영, 정부와의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다시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북한 산업이나 기업에 관한 주제에 흥미가 있는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또는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후배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

북한의 산업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북한의 산업이든 경제든 우선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자세히 보면 조금은 보인다는 것이다. 농담 반으로 가급적이면 북한 산업 연구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면 분명 조금씩 보일 것이다. 북한이 옛날보다는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실제로 시도하려고 한다는 점이 더 보이고 있다. 하려는 시도와 역량이 다르긴 하지만 그 노력이 실제로 발현되는 부분도 단편적이나마 보인다. 꾸준히 보면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산업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현대적인 산업은 동일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 자체를 알아야 한다. 산업을 모르면 무역 통계를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거시경제 통계는 해석이 되겠지만 무역을 통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해당 산업을 모르면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여러 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산업전문가가 아닌 한, 한 번 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산업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무역 통계를 보면 훨씬 많은 것들이 보일 것이다. 산업 통계,

즉 무역 통계를 세부적인 분류까지 분석하고 해당 산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한다면 연구할 만한 영역이 꽤 있다. 예를 들어 식품가공 산업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북한 식품가공 산업의 시장규모를 모른다고 해도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식품가공 산업에서 포장지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포장지의 수입규모는 알 수 있으니 포장지의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전체 시장 구조를 추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직경 100㎜의 도수터널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을 이용해서 김책제철소의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이 정말 대략적이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

저는 북한경제를 CG가 많이 들어가는 실사영화라고 표현한다. 실사영화이긴 하지만 CG를 많이 그려내야 하는 것이다. CG를 위화감 없이 실사와 가깝게 그릴수록 그 영화가 성공할 수 있듯이 북한경제에 CG를 그려 넣으려면 실사를 많이 봐야 한다.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연구하면 조금씩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산업전문가가 나오면 좋겠다.

▌오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 특히 북한의 산업과 기업 분석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배웠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통일연구원, 2016.

양문수, "북한의 국영기업의 관리·운영 실태와 평가," 『캠코리뷰』, 제1권 제3호. 2014.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산업연구원, 2003.

〈북한문헌〉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경제사전 Ⅰ』,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웹사이트〉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접속일: 2020. 12. 21).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접속일: 2020. 12. 21).